

인천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올해 인구정책에 6182억 투입

고령사회 대응 등 48개 세부과제 인구 감소지역 내 사업 발굴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도

인천시가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연도별 계획인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구조변화 대응 등을 전략으로 4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 소요 예산은 6182억원이다.

시는 이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 주거, 교통 등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구영향평가도

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은 지난해 6월 수립한 인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토대로 4대 전략, 12개 실천과제, 59개 실천사업이 담겼다.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이 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의 시행계획이 반영됐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전년 대비 338억원(30%)이 증가한 1496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도 추진 중이다. 올해 시 광역지원계정은 4개 사업(9억5000만원),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8개 사업(144억원)이 추진된다.

시는 그중 군·구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 평가등급에 따라 기금을 배분하는 만큼 워크숍과 컨설팅 등을 통해 군·구 사업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맞춤형 지역특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평가등급 상향에도 힘쓸 계획이다.

인천시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동구는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시는 지역 간 특성을 면밀히 살펴 인구 유입 증가와 지역 활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시는 인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 관련 계획 심의를 진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 처음 총 25명의 위원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구는 저출생, 일자리, 주거, 교통, 보건·복지, 청년 등 여러 분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며 “인구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교육사다리 ‘서울런’ 올해 682명 대학 합격

고3 학생 1084명 중 절반 이상 합격 참여 학생 87% “입시준비 도움 돼”

지난해 서울런 회원인 고3 이상 학생 중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1084명이며, 이 가운데 682명이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462명과 비교해 220명 늘어난 숫자다. 또 10명 중 9명은 입시 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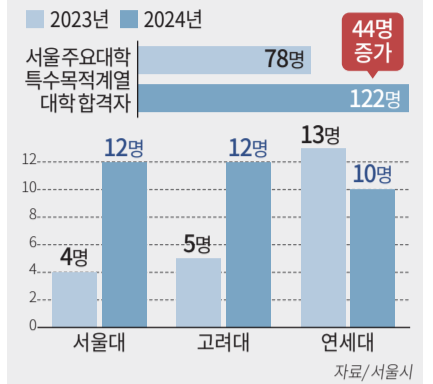
서울시는 21일 ‘서울런 이용자 진로·진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런은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1년 8월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시는 취약계층 6~24세 학생들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한다.

설문에 응답한 고3 이상 서울런 회원 1243명 중 수능 응시자는 108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82명이 2024학년도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를 비롯한 시내 11개 대학과의·약학계열·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

서울런 서울 주요대학 합격자



적계열 대학 진학 인원은 122명으로 전년 78명보다 56.4%가량 증가했다.

이용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수능 응시자의 87%가 ‘입시 준비에 서울런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95%는 ‘후배들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서울런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 시는 ‘AI 학습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한다. AI가 학습 진단 결과를 반영해 80만개의 검증된 EBS 문항 중 개인 맞춤형 문제를 제시하고 자주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 풀 수 있도록 돕는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방지대책 마련

소유자 25% 이상 반대시 신청 불가 투기 의심시 건축허가·착공 불허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공공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시는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서울 시내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주거지 모습. /뉴시스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조개기·갭투자 등 투기 조짐이 보여 이를 해소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구청장 판단 아래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사례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외 가능하다.

투기 세력 유입 초기 차단을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모아타운 공모 접수일’로 앞당겼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 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은 구청장이나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 가능 구역별 조합 설립 인가가 돼야만 사업이 진행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의를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학교 체육, 주의력·사회성 발달에 도움”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 효과성 검증

학교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주의력과 사회정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대에 의뢰해 ‘인지·사회성 발달을 위한 운동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정책 연구를 진행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서울 학생들의 신체력과 마음력 회복을 위해 아침운동 활성화와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교체육 정책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진들은 대상 학생들을 운동군과 통제군으로 나눠 주의력(ADHD) 수

준, 사회정서역량척도, 주의집중력 검사로 인지성·사회성을 측정했다.

운동군은 12주간 주 2회, 준비운동 포함 45~50분 운동을 했으며, 체육과 교육과정 중 도전·경쟁 영역에 해당하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9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주 2회 약 1시간 정도 운동프로그램은 초·중학생들의 인지, 사회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의력 평가 중 ‘인지부족’에 대한 결과가 통제군(0.03)에 비해 운동군(0.17)에서 실험 전후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정서 역량에서도 운동군 학생(0.13)이 통제군 학생(0.08)들보다 실험 전후 의미 있는 향상을 나타냈다. /이현진 기자 lhi@

오늘의 날씨

3월 22일(금) 음력: 2월 13일

수도권 날씨: 4 ~ 1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0/15, 동두천 1/15, 가평 -1/15, 파주 0/16, 서울 4/16, 양평 1/16, 인천 5/15, 수원 5/16, 용인 5/16, 평택 2/18, 백령도 5/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시, 부상제대청년 유공자 등록 지원

공무직 지원시 가산점 적용도

서울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 지원한다. 보다 많

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 심사, 의료 자문, 행정 심판·소송 등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전 과정을 도울 방침이다.

또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공무직에 지원할 경우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부여되는 3%의 사회형평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자리사업을 신청하면 가산점(10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전공의 ‘최대 연속수련 시간’ 우리나라 36시간, 영국 13시간”
▲교육부 “의대 증원, 국가정책…대학들 임의로 정원 조정 못해” /사진 뉴시스

▲작년 암 진료비 10조 넘어…5년간 진료선암·피부암·척장암 급증
▲올해부터 직업계고 학생도 ‘진로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받는다



▲검찰, SK지오센트릭 본사·공장 압수수색…사망사고 관련 /사진 뉴시스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압수수색…檢 “재판개입도 수사”